

2011년 경제전망과 주류산업

은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지난해 3분기 이후 경기둔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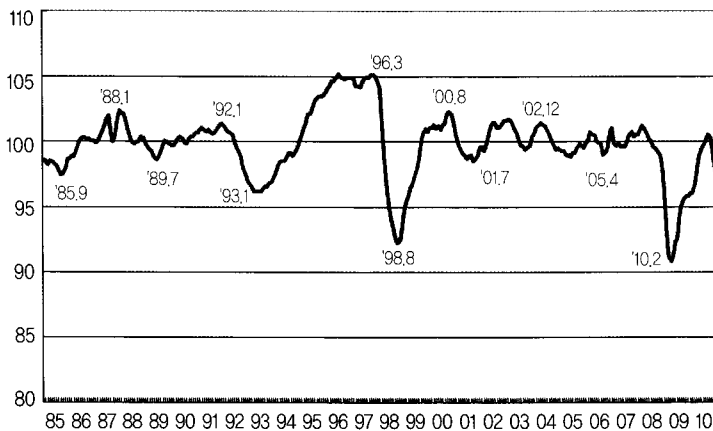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함으로써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당초 앨런그린스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이사회(FRB) 의장이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위기”라고 표현했듯이 1929년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위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각국 정책당국이 보조를 맞춰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공급 증대, 금리인하 등 전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글로벌 경기는 의외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경제는 2007년 12월을 정점으로 하강하다가 2009년 6월 바닥을 치고 회복했으며, 일본경제는 2008년들어 하강

하다 2009년 3월에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반전됐다. 중국경제도 2009년초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2008년 1월부터 하강국면에 들어갔던 한국경제는 2009년 2월을 바닥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회복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다. 대부분 국가의 200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이 0.2%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전례없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출 확대와 팽창적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5.25%→2%)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경기는 둔화 양상을 보였다.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현실화된

경기사이클(동행지수순환변동치)



것이다. 연간으로는 2009년에 경기가 부진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6.1%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는 둔화됐다. 전년동기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이 1분기와 2분기의 8.1%, 7.2%에서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4.5%, 4.8%로 하락한 점이 이를 말해준다.

경기흐름을 시간적 연속성 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기비 성장률로 보아도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7%와 0.5%로 1분기 2.1%, 2분기 1.4%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통계에서 지난해 8월 이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6~7개월 후의 경기향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하강은 앞으로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도 동시에 하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둔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8%에서 올해 4.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한국경제도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올 1월 선행지수가 12개월만에 반등해 일정기간 이후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심어 주고 있다.

| 하반기 이후 회복가능성 |

앞으로 경기향방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미국의 경기동향, 유럽의 재정위기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중동사태 등이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공식적으로는 2007년 12월 시작해 200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높은 실업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 위기가 겹치면서 경기 회복은 가시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미국 당국의 팽창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이사회(FRB)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추진 중이다. 올해 6월까지 6000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풀어 국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감세조치 연장에도 합의해 미국 1가구당 연간 3000달러(약 350만원) 상당의 소득을 늘려 줬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생긴 셈이다. 미국 경제성장에 70%를 기여하는 소비 규모가 늘어난 만큼 성장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월가 투자은행(IB)들은 대부분 올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와 2012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3.6%에서 3.4%와 3.8%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엔진인 미국경제의 회복가능성은 한국경제의 회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의 국제상환 시점이 올 4월에 집중돼 있어 재정위기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7200~7700억유로에 달하는 재정안정기금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유럽위기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기는 하지만 미국 등의 경기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10.3%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GDP가 39조 7983억 위안(약 6조달러)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한 중국은 올해도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취하겠지만 국내투자 확대 및 내수촉진 등이 성장률을 떠받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홍콩을 포함해 30%를 넘는 중국의 높은 성장세는 한국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돼 리비아와 중동지역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국제유가를 급등시켜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이 쉽지 않다. 그러나 만일 사태가 장기화되고 시위가 많은 국가로 확산된다면 세계경제에 적지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다행히 사태가 비교적 단기에 수습된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최근에 생긴 돌발변수가 미국과 한국 등의 향후 경기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한국경제가 지난해 6.1% 성장률에서 올해는 4%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기흐름의 모습은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참고로 국내외 기관별 올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정부 5%, 한국은행 4.5%, 한국개발연구원(KDI) 4.6%, 삼성경제연구소 3.8%, LG경제연구원 4%, 현대경제연구원 4.3%, 국제통화기금(IMF) 4.5% 등이다.

Ⅰ 경상수지는 흑자 누적에 원화 가치 상승 Ⅰ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282억달러로 2009년 328억달러보다 축소됐다. 상품수지(419억달러)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흑자가 확대됐으나 서비스 수지(-112억달러)는 적자가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흑자 누적, 대일본 적자 확대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대일적자 361억

달러, 대중흑자 452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저평가된 원화가치와 원자재 가격안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반여행, 유학·연수,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취약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좀처럼 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누적과 자본시장으로의 외국자금 유입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올 1월말 2976억달러로 늘었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액 규모다.

원화가치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 23일 1206원으로 1200원선 위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떨어졌다. 원화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누적과 외국자본 유입 증가,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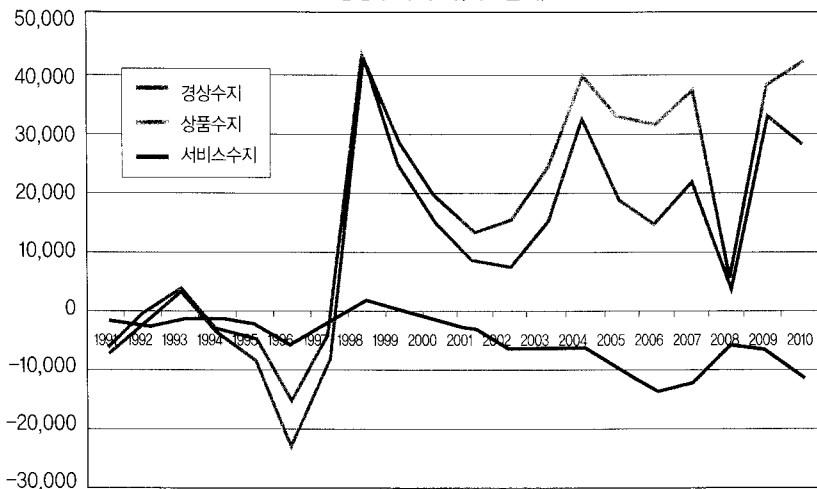
경상수지를 균형시켜주는 적정환율 개념인

실질실효환율 개념으로 보면 원화가치는 중장기적으로 달러당 1050원선 안팎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흑자국은 흑자를 줄이기 위해 그 나라의 통화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원화가치 상승세는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 외화유입 규제 필요성 증대 |

각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경기회복과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 영향으로 국제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신흥국 증

경상수지 추이(백만달러)



시 등 자산시장의 거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흥국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자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7월과 11월, 올 1월 등 3차례에 걸쳐 2.0%에서 2.75%로 0.75%포인트 올렸지만 시장금리는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다. 외국자금이 한국의 채권매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외국자금 유입 증가 속에서 한국 정부도 외화 유입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10월 하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이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규제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외환거래에 대한 '토빈세' 부과, 파생상품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14%의 원천과세 부활 등을 도입가능한 규제조치로 예시했다.

한국의 고위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자본유입 규제 필요성이 거론돼 온게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27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가진 오찬연설에서도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안전장치를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자본규제의 가능성은 상당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외화유입 규제 강도는 경제대국들의 통화정책에 달려 있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이 중요하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확대하고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수록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일본 EU 등이 경쟁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취할 경우 자금 유입은 가속화될 것이고 유입규제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다만 최근 신흥국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이탈 조짐이 나타나면서 자본유입 규제 논의는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으나 자본이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 자본유입 규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물가 상승세 확대속에 기준금리 인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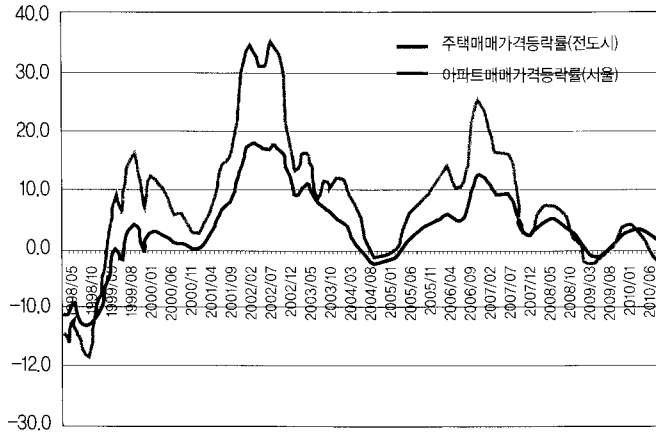
지난해 가을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9월 3.6%, 10월 4.1%, 11월 3.3%, 12월 3.5%, 올 1월 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급등의 주된 원인은 한파와 국제농산물 가격상승, 구제역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양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소비자물가를 작성할 때 비중이 8.8%밖에 되지 않지만 올 1월 가격이 전년동월에 비해 17.5%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물가상승 기여도 1.49% 포인트). 신선식품 가격은 1년전에 비해 무려 30.2%나 치솟았다. 유가도 이집트 사태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예상보다 크게 올라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측 요인 뿐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물가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회복과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등이 공업제품과 서비스 부문의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올 1월에 전년 동월대비 2.6% 올라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말해주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자 지난해 11월초 정부는 물

주택가격 등락률(전년동기 대비, %)



가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가격동향을 주시해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으면 시중가 인하를 유도할 48개 품목을 정해 발표했다. 48개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높거나, 국민 다소비 품목이거나, 산업 집중도가 높거나 정부가 특별히 생활필수품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거나 가격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 현황과 추이, 국내외 가격차를 자세히 비교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품목에 대해선 시장구조 개선, 경쟁환경 조성, 독과점 사업자 가격 인하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8%에서 올해는 3%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로까지 인하했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

까지 3차례에 걸쳐 2.75%로 올렸다. 아직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금리가 적어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때까지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다.

┃ 전세값 상승세 속에 집값 상승 가능성 ┃

부동산시장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가격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8월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연장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8·29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뚜렷한 약효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의 주택경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며 그 영향이 수도권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거래부진과 가격하락 때문에 주택공급이 축소된 가운데 미분양량이 줄어들고,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그 한 단면이다. 시중유동성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점도 주택경기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한 요인이다.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택 매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대비 9월말 전국 주요 지역 주택가격변동률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2%, 1.6% 하락했으나, 부산은 6.8%나 올랐다. 대전과 광주, 대구도 각각 4.3%, 0.7%, 0.4%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 자료를 내놓았다.

! 경기회복에도 주류소비 증가는 한계 !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주류소비는 크게 회복될 길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류가 비내구 소비재로서 경기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류 소비 증가세가 담배소비와 아울러 정체상태에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생활에서 술과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주류·담배 소비액(계절조정)은 3조4900억원으로 국내 소비지출 148조 6000억원의 2.35%를 차지했다. 주류·담배 소비는 1980년대 초반까지 6%를 넘었으며, 1975년 4분기에는 8%대에 달할 정도로 한때 우리 국민의 주요 지출 품목이었다. 당시로선 식료품·음료(37.03%), 의류·신발(10.91%), 음식·숙박(10.22%) 등 '의식주' 다음으로 큰 비중이었다. 그러나 술·담배 소비 비중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래 가장 작아졌다.

주류에 한정해서 볼 경우 국내 희석식 소주와 맥주 출고량은 지난해 9월까지 89만 9000kl와 138만 8000kl로 전년 동기 출고량의 95.9%와 98.2%에 그쳐 감소세를 나타냈다. 직장 등에서의 희석 감소와 가정중시 등 생활패턴 변화, 건강지향형 음식문화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수입시장 개방 등으로 외국산 주류가 국내 주류시장에 깊이 파고 들면서 국내주류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막걸리의 해외수출이 크게 늘고 있기는 하나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류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지난해 수출액은 1910만달러로 2009년과 견줘 3배 상승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558만달러, 미국 175만달러, 중국 91만2000달러, 베트남 27만5000달러, 호주 13만5000달러순으로 집계됐다.

몇 년전부터 검토되고 있는 주류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주류소비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09년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술과 담배에 대한 일종의 죄악세(Sin Tax) 인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와 같은 독주에 대한 세금 인상폭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세계개편을 검토했는데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일단 보류됐다. 정부가 주류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류 소비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음주(18조9753억원)와 흡연(5조6395억원)에 따른 손실 비용은 총 24조6148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주류소비 수준은 주요 선진국 중 3위

주류 수입실적

(천달러,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맥주	13,664 (6.7)	14,848 (8.7)	16,532 (11.3)	20,506 (24.0)	30,579 (49.1)	39,373 (28.8)	37,156 (-5.6)	43,750 (17.7)
위스키	250,401 (1.0)	213,682 (-14.7)	228,915 (7.1)	225,997 (-1.3)	270,294 (19.6)	259,182 (-4.1)	194,812 (-24.8)	231,027 (18.6)
포도주	45,783 (55.6)	57,979 (26.6)	67,655 (16.7)	88,607 (31.0)	150,364 (69.7)	166,512 (10.7)	112,450 (-32.5)	112,888 (0.4)

주:1) ()속은 증가율 2) 맥주는 MTI코드 015720, 위스키는 015750, 포도주는 015740

로 높기 때문에 주류의 소비를 적정 수준에서 억제해야 국민건강 향상 등 사회적 후생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주류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둔화되고 있는 주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막걸리 영향으로 포도주 수입증가는 미미 |

주류별 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포도주(와인)와 위스키, 맥주 수입이 모두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포도주의 수입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포도주 소비가 본격 늘기 시작한 1999년에 포도주 수입은 1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 31%, 2001년 16.7%로 증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2002년 27.4%, 2003년 55.6%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다. 2004년과 2005년에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2006년 이후 다시 높아져 2007년에는 증가율이 69.7%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경기침체와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둔화돼 10.7%로 증가율이 둔화되더니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32.5%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수입이 1억 1289만달러로 0.4% 늘었다. 지난해

에는 경기가 회복됐고 다른 주류의 수입은 크게 늘었는데도 포도주 수입 증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의 와인'으로 통하는 막걸리 보급 확대로 수입을 상당 부분 대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스키의 경우 수입규모는 여전히 가장 크지만 2008년과 2009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0년만 해도 55.5%를 기록했던 위스키 수입 증가율은 2003년부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며 오르락 내리락 했다. 2007년에는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율이 19.6%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1%, -24.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위스키 수입이 2억 3103만달러로 18.6% 늘었다.

맥주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를 넘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나, 2002년 들어 크게 둔화돼 2004년까지 3년간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쳤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수입증가율이 높아져 2007년에는 49.1%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09년에는 수입증가율이 -5.6%로 마이너스를 나타냈으나 지난해에는 17.7%로 회복됐다. 수입금액은 4375만달러에 달했다.